국별 리포트

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12.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10

Ⅳ. 국제신인도 14

Ⅴ. 종합의견 17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Ⅰ. 일반개황

면 적	17,098 천 km^2	G D P	2조 925억 달러 ('13)
인 구	1억 4,283만 명 ('13)	1 인 당 GDP	14,562달러 ('13)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연방공화제)	통 화 단 위	Russian Ruble(RUB)
대 외 정 책	신흥국과의 유대강화	환 율(달러당)	31.84 ('13)

□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영토와 2013년 말 기준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이 각각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의 풍부한 천연자원, 교육수준이 높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함.

□ 러시아는 에너지산업에 경제가 좌우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12년 8월 WTO 가입으로 시장 개방을 추진함.

□ 2014년 3월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 등 서방의 대러 제재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과는 BRICs 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 설립에 합의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4년 경제성장률은 투자 및 수출감소,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0.2% 예상

○ 러시아 경제는 원유수출 증가 및 국제원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 들어 수출감소, 산업생산 및 투자부진 등으로 10년래 최저치(2009년 제외)인 1.3% 경제성장에 그침.

○ 2014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투자환경 악화 및 투자감소가 예상되고,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따른 국제유가 및 내수위축 등으로 0.2%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14년 8% 예상

○ 2012년에는 식료품 가격안정, 공공요금 인상 연기 등으로 연간 5.1%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식료품과 임금상승 등으로 6.8%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루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러시아의 대러 제재 동참국(EU,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에 대한 식료품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8%로 전망됨.

- WTO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5위의 식료품수입국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아 동 식료품 수입금지 조치는 러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 압력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식료품 수입금지 조치 및 루블화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4년 11월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1%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식료품 분야 물가상승률이 12.6%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심화됨.

□ 에너지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통제 및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우려

○ 2013년에는 국방비 및 공공부문 급여인상 등 지출증가와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악화된 -0.5%를 기록함.

○ 크림반도 합병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에너지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통제 및 국제유가 급락은 러시아 주요 재정수입원인 에너지부문의 생산 · 수익 악화로 이어져 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5~2017년 러시아 정부예산은 배럴당 100달러의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제유가 급락 현상이 심화될 경우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러시아 정부는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3% 세율의 판매세를 신규도입하고, 부가가치세를 기존보다 2%p 인상한 20%로 부과할 예정임.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f
경 제 성 장 률	4.1	4.3	3.5	1.2	0.2
재 정 수 지 / G D P	-3.9	0.8	-0.1	-0.5	-0.9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6.8	8.4	5.1	6.8	8.0

자료: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경제구조 형성

○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경제전반이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임.

- 에너지 부문은 러시아 GDP의 25%,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상품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속광물까지 포함할 경우 총상품 수출의 약 80%에 달해 생산측면에서 에너지산업이 전체 광공업 생산의 1/3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

○ 2014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생산둔화가 우려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산업다각화를 추진할 필요성 있음.

□ 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경제현대화 정책 추진

○ 러시아 정부는 과도한 원자재 분야 의존, 산업경쟁력 부족 등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2020 러시아 혁신전략'을 통해 5대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현대화 5대 전략산업: 에너지효율화(전력망 현대화 등), 원자력기술(원자력발전소 확대 및 기술력 극대화 등), 우주기술(위성 및 통신 기술 등), 의료기술(진단장비 및 의약품 포함), 정보기술(산업별 IT 분야 현대화 등)

○ '2020 러시아 현식전략'의 후속 조치로 2012년 12월 러시아 정부는 과학기술개발, 산업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2가지 국가적 프로그램을 승인함.

- 과학기술 개발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약 1조 6,000억 루블을 투자해 과학기초 연구개발, 연구분야의 경영 및 자금구조 개선, 과학과 교육의 통합 등을 주요목표로 추진 중임.

- 산업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약 3조 5,000억 루블을 투자해 R&D, 산업 및 엔지니어링 관련 인프라 구축, 러시아 내 주요 외국기업의 혁신제품 현지화, 에너지효율성 확보 등이 주요목표임.

○ 다만, 경제현대화 계획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외국인투자 및 해외 고급기술인력 유치 등이 필요하나,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른 계획차질이 예상됨.

□ 부패 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 노출

○ 지나친 행정규제, 부패 관행 등 불확실한 투자환경과 높은 세율, 낮은 공공의료수준, 인프라 부족 등은 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은행의 2014년 기업경영여건에 따르면, 러시아는 189개국 중 종합순위 62위를 차지하였으며, 사업허가(156위/189개국), 투자자보호(100위/189개국), 대외무역(155위/189개국) 등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함.

○ 특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중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rayers Index)는 28개 대상국 중 28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2014년 기준 175개국 중 136위를 기록함.

나. 성장 잠재력

□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각각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의 자원부국임.

- 원유(2013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930억 배럴) 세계 8위, 생산량(일일 1,078만 배럴) 세계 2위

- 천연가스(2013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31.3조 ㎥) 세계 2위, 생산량(연간 6,048억 ㎥) 세계 2위

○ 다만,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에너지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통제로 러시아에 기진출한 미국·EU 에너지기업이 철수할 경우,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능력 하락이 우려됨.

□ 제조업 기반 및 금융산업 취약

○ 러시아는 체제 전환 이후, 제조업 기반 붕괴와 에너지자원에 의존한 경제발전 추진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 중에서도 정유산업이 총생산산액의 2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러시아 내 제조업 비중은 약 15%로 러시아 경제규모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낮은 수준임.

○ 러시아 정부는 제조업 발전을 위해 경제현대화 정책에 따른 5대 전략산업을 지정 및 육성하고 있으나, 생산설비의 노후화, 첨단기술 부재, 낮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의 약한 제조업 기반은 에너지 수출의존도를 심화시킴에 따라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됨.

○ 금융산업의 경우, 자산규모 면에서 상위 5개 은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이며, 그 중 3개 국영은행(Sberbank, VTB, Gazprombank)이 과점하고 있음.

- WEF의 2014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발전수준은 144개국 중 110위로 러시아 경제규모에 비해 낙후하였으며, 금융산업이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금융산업의 낙후로 은행의 자금조달은 해외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직접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보다 해외차입 중심의 기타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양질의 노동력과 우수한 과학기술 수준 보유

○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비교적 양호한 교육체계로 교육수준이 높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러시아 전체인구는 1억 4,250만 명에 달하며, 그 중 노동가능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의 약 70%로 청장년층 비중이 높은 편임.

○ 특히,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 시절 기초과학 및 우주항공, 위성, 로봇 등 첨단기술 강대국으로서 아직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2025 극동개발계획'을 통한 극동지역 개발 추진

○ 2013년 3월 러시아 정부는 2025 극동개발계획 승인을 통해 제조업, 광물자원개발, 임업, 수산업 등 극동·바이칼 지역개발에 약 3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동 계획에 따르면, 플랜트 및 수송망 건설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목표로 2025년까지 극동지역 인구 100만명 증가, 역내 총생산 2.2배, 수출 3배, 공업생산량 53%를 증대시킬 계획임.

○ 특히, 2013년 12월 푸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함.

- 극동개발부 장관이 극동지역 전권대표를 겸임하였으나, 2013년 9월 극동개발부 장관으로 알렉산드르 갈루쉬카(Alexander Galushka), 부총리 겸 극동지역 전권대표로 유리 트루트네프(Yury Trutnev)를 임명한 것은 동 지역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사례임.

○ 러시아는 향후 극동지역에 특별경제개발구역(Special Advanced Economic Development Zones) 조성을 통해 수출과 내수 목적의 생산라인 건설을 위한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 특별경제개발구역 진출 기업에는 향후 5년간 법인세, 광물자원 채굴세, 토지 및 재산세, 보험관련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건설을 위한 인허가 조건 간소화, 세관통관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될 예정임.

□ WTO 가입을 통한 시장개방 추진

○ 러시아는 2011년 12월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승인 이후 2012년 8월 WTO에 정식가입함으로써 시장개방 및 무역활성화를 추진함.

- 러시아는 WTO 가입조건 이행을 위해 2012년 8월 9.5%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2015년까지 5.94%로 인하할 예정임.

○ 러시아 소비시장의 40~60%를 차지하는 수입품 가격인하로 내수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WTO 가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보다 에너지자원 등 저부가가치 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산업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있음.

○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EU는 대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식료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 규정 위반임을 이유로 제소를 준비하는 등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 활성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자본유출 심화 및 루블화 환율상승 등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 러시아 중앙은행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로 자본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3월, 4월, 7월, 10월, 12월 등 총 6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함.

- 2014년 연간 자본유출액은 1,400억 달러로 예상(2013년 자본유출액 650억 달러)되며,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5년 자본유출액 역시 1,20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2014년 연초 5.5%였던 기준금리는 10월까지 4차례의 인상을 통해 9.5%까지 인상되었으나,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루블화 환율상승 및 자본유출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4 12월 11일 기준금리를 1.0%p 인상한 데 이어 불과 5일만인 12월 16일 17%(6.5%↑)로 급격히 인상함.

○ 러시아는 2013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나 최근의 대내외적 상황 악화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향후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f
경상수지	67,452	97,274	71,282	32,761	33,208
경상수지/GDP	4.4	5.1	3.5	1.6	1.6
상품수지	146,994	196,854	191,663	180,314	180,944
수출	392,674	515,409	527,434	523,294	523,294
수입	245,680	318,555	335,771	342,980	342,980
외환보유액	432,949	441,162	473,110	456,447	371,805
총외채잔액	488,940	545,150	637,826	727,554	709,902
총외채잔액/GDP	32.1	28.7	31.4	34.5	37.5
DSR	11.7	10.4	9.7	11.4	13.8

자료: EIU 및 IIF.

□ 국제유가 및 루블화 급락, 주요 교역국과의 거래감소 등에 따른 무역 축소 예상

○ 2012년에는 수입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하락한 GDP 대비 3.5% 수준을 나타냄.

○ 2013년에도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소득수지적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1.6%에 그쳤음. 2014년에는 국제유가 및 루블화 급락 등의 영향으로 동 비율이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미국·EU 등 서방과 러시아의 상호간 무역분쟁 등으로 교역규모 감소 및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됨.

□ 루블화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달러) 투입 등으로 2014년 외환보유액 감소 전망

○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세계 4위(중국, 일본, 스위스, 러시아 順)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자본 유출,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경상·외환유입 축소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연초 대비 900억 달러가 감소하였음.

- 러시아 중앙은행은 환율방어로 2014년 11월까지 약 700억 달러, 변동환율제도 도입('14. 11. 10) 이후에도 약 50억 달러 가량의 외환보유액을 소진함.

○ 2014년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7.8개월 분으로 향후 국제유가 급락, 루블화 환율상승 및 자본유출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정부의 외환통제 가능성이 우려됨.

- 다만, 외환보유액과 별도로 1,8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펀드(준비기금 포함)를 포함할 경우 러시아의 대외지급준비자산은 더욱 늘어나지만, 외환통제 등의 긴급대책이 취해질 경우 동 펀드의 규모도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 및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루블화 가치하락 압력 심화

○ 2013년 12월 시작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통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달러 대비 루블화 역시 지속적인 환율상승 압력을 받고 있음.

○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시작됨에 따라 자본유출 및 루블화 가치하락 압력이 점차 강화되었으며, 특히, 2014년 7월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루블화 환율도 급속히 상승함.

- 2014년 7월 최고 112달러까지 상승한 브렌트유는 이후 하락추세를 지속하며, 2014년 12월 중순 이후 60달러 내외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음.

- 2013년 미달러 대비 루블화 평균환율은 31.8루블 수준이었으나, 2014년 7월 이후 국제유가 급락과 더불어 루블화 환율상승 추세가 지속되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된 12월 16일 67.9루블(종가 기준)로 고점을 찍은 이후 환율상승 추세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50루블 대에서 변동하고 있음.

□ 외채구조는 양호한 수준 유지

○ 총외채잔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2년 이후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34.5%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상승한 3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임.

- 총외채잔액/GDP 추이(%): 31.4('12)→34.5('13)→37.5('14f)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기준 113.8%를 기록한 데 이어 2014년에도 전년 대비 상승한 117.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18.5%로 외채상환부담은 낮은 수준**

○ 러시아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3년 기준 18.5%, 2014년 14.8%로 전망되어 85% 수준의 외채가 중장기로 구성되어 있음.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이나, 2014년 기준 31.7%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2014년 기준 13.8% 수준이어서 외채상환부담은 낮은 상태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크림반도 합병(2014.3) 이후 푸틴 대통령의 국내지지율 상승 등 입지 강화되었지만, 최근의 경기악화로 지지율 하락 예상**

○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 등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내지지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 2014년 8월 푸틴 대통령의 국내지지율이 87%에 달한 것으로 러시아 현지 여론조사 기관은 분석하였으며, 최근 2014년 12월까지도 8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림반도 합병 이후인 2014년 3월부터 급등하였으며, 이는 푸틴의 강경노선에 따른 러시아 내 우파 세력의 결집, 언론을 이용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내 정책선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집권 3기를 맞은 푸틴 대통령은 국내외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지난 1, 2기 정책 노선과 달리 반서방주의와 강한 러시아를 강조한 대외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최근 서방의 대러 제재, 루블화 환율상승,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라 러시아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러시아 경제 악화 시 푸틴 대통령의 국내지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9월 지방선거 집권여당 압도적 승리

○ 2014년 9월 30개 연방주체 주지사, 3개 연방주체 시장, 14개 연방주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열렸으며, 동 선거를 통해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72.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함.

- 30개 연방주체 주지사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에서 모두 통합러시아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의회의원 선거에서도 통합러시아당이 모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함.

○ 동 지방선거 결과는 집권 3기 푸틴 대통령 및 현 정부에 대한 높은 국내 지지율을 보여주며, 금번 지방선거를 통해 2016년 예정된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경제성장 둔화 및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사회불안 가능성 상존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로 자본유출 및 소비자물가상승 압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 압력과 자본유출에 따라 기준금리를 지속 인상함.

○ 계층간 빈부격차가 큰 상황에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한 금수조치 등 수출입 제한 장기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향후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 있음.

- 실업률은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 등으로 2014년 4.9%로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러시아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사회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러시아 최대 석유재벌이었던 유코스 전직회장 호도르코프스키는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푸틴의 지지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경제위기 가능성과 함께 반 푸틴 여론이 조성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등 주변국가와의 분쟁 지속으로 접경지역 사회불안 가중

○ 러시아는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의 분리주의 반군에 무기 및 인력 등 후방 지원을 지속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갈등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

○ 러시아는 2008년 그루지야 내 남오세티아 및 압하지아 자치국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따른 그루지야 정부의 남오세티아 공격에 개입함으로써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후 냉각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남오세티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지역으로서 러시아는 남오세티아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러시아 보호령으로 지정코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북부 코카서스 지역 국지적인 소규모 소요사태 발생

○ 2013년 12월 소치 동계올림픽을 즈음하여 인근 볼고그라드에서 이슬람 반군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자살폭탄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북부 코카서스 지방의 테러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 북부 코카서스 지방의 다게스탄, 체첸 등은 러시아 연방에 소속된 이슬람 자치공화국으로 분리독립 투쟁을 벌이는 이슬람교도 반군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테러조직에 대한 엄정한 처리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북부 코카서스 지역의 경제여건 개선을 통해 반정부세력을 무력화하는 등 강온 양면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 · EU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악화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지원 지속에 따라 미국·EU 등 서방은 수차례에 걸친 대러 경제제재를 실행하는 등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미국과 EU는 초기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자산동결·비자발급 중단 등 소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왔으나, 2014년 7월 이후 대러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함.

- 미국은 2014년 7월 분야별제재대상(SSI) 발표를 통해 제재대상 기업에 대한 미국 내 금융거래, 채권발행 및 지분투자 등을 금지하였으며, EU 역시 2014년 7월 포괄적 제재조치안 발표를 통해 러시아 은행·국방·에너지 관련기업에 대한 대러 제재를 결정함.

○ 미국·EU는 이후 2014년 9월 금융제재 강화, 에너지분야 및 국방분야 제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러 추가제재 방안을 시행하는 등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12월에는 크림반도에 대한 투자금지 등의 조치를 취함.

○ 한편, 러시아는 2014년 8월 미국·EU 등에 대해 농산품, 원료, 식품 등의 수입제한(1년간) 조치를 시행하는 등 서방의 대러 제재에 맞대응하고 있음.

- 2014년 12월 러시아 가스프롬은 연간 630억 ㎥ 규모 러시아산 가스의 남동부 유럽 수출을 위한 사우스스트림 가스관 건설사업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남동부 유럽 국가의 가스공급 문제 및 경제적 손실이 우려됨.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EU 및 NATO 가입 움직임에 대한 반발

○ 우크라이나 포로셴코 대통령은 2014년 12월 폴란드 의회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EU 및 NATO 가입 방침을 발표하는 등 친서방 정책을 펴고 있음.

- 포로셴코 대통령은 당초 2014년 5월 취임 후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시기상조라고 했으나, 러시아가 최근 루블화 환율상승으로 위기를 맞음에 따라 NATO 가입 추진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됨.

○ 러시아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2010년 발표한 비동맹 외교정책에 따른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NATO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을 중지시키려는 평화적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중국, 이란, 인도, 터키,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해 중국, 이란, 인도, 터키,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푸틴 대통령은 2014년 12월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에너지·군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합의함.

○ 2014년 7월 푸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기간 브라질에서 열린 BRICs 제6차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브라질 등 주요국 정상과 자원분야를 축으로 군사와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BRICs 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 설립에 합의함.

- 푸틴 대통령은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Rosneft의 브라질 합작회사 설립 및

자원탐사사업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에너지 이외 군사와 안보 등 다방면의 협력강화를 약속함.

○ BRICs 개발은행은 세계은행, IMF 등 미국·EU의 주도의 국제금융 질서를 새로이 정립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장기적 개발원조 자금 제공에 주안점을 둘 예정임.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5개 회원국이 100억 달러씩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임.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비중 낮은 수준

○ 2014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잔액은 단기 46억 달러, 중장기 357.3억 달러이며, 이 중 0.5%에 해당하는 2억 220만 달러(단기 50만 달러, 중장기 2억 170만 달러)가 연체 중임.

□ 1998년 러시아 재정위기 발생사례 우려

○ 러시아는 1998년 당시 국제유가 35% 하락, 루블화 74% 하락, GDP 대비 재정수지 -5.6% 등의 위기를 겪으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에 따라 러시아 및 채권국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 이는 최근의 러시아 경기침체, 외환위기 상황에서 고려할만한 주요 사례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S&P는 2014년 중 러시아 신용등급 강등, Fitch는 러시아 등급전망 부정적 유지

○ S&P는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EU간 갈등 및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로 러시아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한 단계 하락한 BBB-로 강등하였으며, 2014년 12월 러시아를 부정적 관찰대상(CreditWatch Negative)에 올려 등급 추가강등 가능성을 경고함.

- Moody's도 2014년 10월 서방의 대러 제재 심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우려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한 단계 하락한 Baa2로 하향조정함.

○ 한편, Fitch는 2014년 7월에 러시아 신용등급을 기존 BBB등급으로 유지하였으나, 부정적(Negative) 등급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 OECD는 2014년 1월 열린 국가위험도 평가회의를 통해 러시아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유지, 충분한 규모의 외환보유액 보유 등을 이유로 기존 3등급 유지를 결정하였으나, 2015년 1월 평가회의를 통해 등급 하향조정 가능성 있음.

□ CDS 프리미엄 및 국채수익률 급등 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평가 악화

○ 러시아 CDS 프리미엄(5년)은 2014년 초 165bp 수준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00~300bp 수준을 유지하다 2014년 11월말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한 달 내 최고 578.76bp까지 상승하는 등 러시아 경제위기를 반증함.

○ 러시아 국채수익률(10년)은 2014년 초 7.75% 수준이었으나, 최근 러시아 경제위기로 2014년 12월 중 13.79%까지 급등하는 등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추세임.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인수불가

○ 영국 ECGD: 개별심사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Negative (2014. 8)	C1/Stable (2013. 11)
OECD	3등급 (2014. 1)	3등급 (2013. 1)
S&P	BBB-/Negative (2014. 10)	BBB-/Negative (2014. 4)
Moody's	Baa2/Negative (2014. 10)	Baa1/Negative (2014. 6)
Fitch	BBB/Negative (2014. 7)	BBB/Negative (2014. 3)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0. 9. 30 (북한과는 1948. 10. 12)

□ **주요협정**

○ 무역협정('90), 원자력협력협정('99), 관광협정('01), 에너지분야협력협정('02), 항공협정('03), 우주기술협력협정, 가스산업협정('06), 비자협정('10), 해상운송협정('11), 근로활동협정('12), 사증면제협정('13)

□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세 지속되고 있으나, 서방의 대러 제재 강화 이후 수출액 감소**

○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수출국이자, 12위 수입국으로서 양국간 교역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년 기준 양국간 교역액은 226.4억 달러(수출 111.5억 달러, 수입 114.9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유, 석유제품, 석탄 등 주로 1차 산품임.

○ 그러나, 미국·EU 등 서방의 대러 제재가 포괄적으로 강화된 2014년 7월 이후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액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4년 8~10월의 대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2.5%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의 수출감소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 **한·러시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10,305	11,097	11,149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수 입	10,852	11,354	11,495	원유, 석유제품, 석탄
합 계	21,157	22,451	22,64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2014 1~9월 중 전년동기 대비 증가**

○ 2013년 대 러시아 직접투자금액은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부문의 투자 증가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2억 달러를 기록함. 대 러시아 직접투

자 누계액은 2014년 9월 말 기준 21.9억 달러(신규법인수 491개) 수준임.

- 2014년 1~3분기 대 러시아 직접투자금액은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부문의 투자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6.9% 증가함.

○ 우리나라 기업은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에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농림수산업, 광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등으로 투자업종이 다양화 되고 있음.

□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경제관계 위축 예상

○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및 투자 프로젝트 추진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2014년 7월 대러 제재로 미국 내 금융거래가 금지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미국 결제은행을 통한 달러화 결제 제약 등 러시아 앞 수출금융 및 교역 감소가 전망됨.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무역·투자 위축이 예상되나, 전체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총교역액 중 러시아 비중은 2.1%에 불과하며, 대러 직접투자 잔액은 12억 달러 수준, 국내 금융기관의 대 러시아 익스포저는 13억 6천만 달러로 전체 대외여신 1,083억 4천만 달러의 1.3% 수준임.

Ⅴ. 종합 의견

□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1.3%에 그쳤으며, 2014년에도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으로 촉발된 서방의 경제제재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 등으로 전년대비 하락한 0.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국제유가 급락 및 루블화 환율상승으로 재정수지 적자 및 교역규모 감소 등이 우려되며,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투입으로 외환보유액 역시 크게 감소함.

○ 2014년 7월 이후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는 약 48.5% 급락하였고, 루블화 역시 52.2% 급락함에 따라 러시아의 재정 및 외환수입이 축소되고,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태임.

□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였으나, 에너지자원에 의존한 경제발전 추진으로 제조업 및 금융산업이 취약한 수준임.

□ 미국·EU 등 서방은 수차례에 걸친 대 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 주요 국영은행 및 기업에 대한 금융, 에너지, 국방분야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러시아는 향후 중국,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국·EU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2014년 3월 이후 미국 7차례, EU 9차례 등)로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산업 및 금융기관(국영은행 등)에 대한 자본조달 및 투자제한 등의 조치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됨.

조사역 김세진(☎02-6255-5703)
E-mail: sejin0302@koreaexim.go.kr